

<성명서>

정부와 국방부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알 권리를 존중하라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은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던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무자비하게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엽기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사건 보고를 받고도 9월 23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화상연설을 강행했으며, 청와대와 여당은 북한이 25일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 한마디로 사태를 덮고 북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방부 역시 처음부터 근거없는 ‘자진월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실을 호도하고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도발에 대한 응징을 모색하기보다는 청와대의 눈치를 살피면서 가해자인 북한을 두둔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즉,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군이 스스로 본분을 망각한채 그리고 국민의 감정과 알 권리를 무시한 채 남북 정부 간 관계유지에만 연연하는 주객전도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군의 이번 만행은 북한 지도자의 사과 한마디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만행 이후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에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 이에 우리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알 권리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한다.

첫째, 북한의 이번 만행이 4·27 판문점선언,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제네바협약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런 합의들에 “총기 사용 금지”라는 표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한 정부 당직자의 설명에 대해 국민이 어떤 감정이 어떨 것으로 보는가? 판문점선언은 제2조에서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금지”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의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는 대책 수립”에 합의했으며, 군사분야 합의서 역시 제1조에서 “모든 문제의 평화적 협의 및 해결”에 합의한 바 있다. 남북한이 가입하고 있는 제네바협약도 민간인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외 전문가들은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가 지나치게 북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음을 지적해왔지만 북한은 이마저 준수하지 않고 있음을 이번에 재확인시켜 주었다. 때문에 정부는 북한의 사과 한마디로 사태를 덮으

려 하지말고 차제에 북한의 남북합의 및 국제법 위배 여부를 확실하게 규명하여 국민 앞에 입장을 밝혀라.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는 길이다.

둘째, 통지문을 통한 북한 지도자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는 상황모면용 표현일뿐이라는 국내외의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실제로 통지문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녘동포들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희생자를 ‘침입자’로 표현하고 그를 사살한 것을 마치 ‘정당한 자위권의 행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일관했으며, 우리군이 ‘만행,’ ‘응분의 대기’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불경스러운 대결적인 표현을 쓴데 대한 커다란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탄과 한국국민의 대북여론 악화를 의식한 표리부동의 궤변으로 평가하며 세계의 많은 인권단체들의 규탄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항에서도 정부는 “미안하다”라는 표현 한 마디로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셋째, 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면서 처음부터 ‘자진월북설’로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는 시중의 의혹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희생자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자 두 명의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월북을 원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임에도 국방부가 ‘자진월북’을 언급하여 북한군의 만행을 정당화시켜주려 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궁금해하고 있다. 그것이 군의 분분을 망각한 정치권력 눈치보기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국방부가 진정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의 군이라면, 자진월북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이 수궁할만한 이유들을 밝혀야 한다.

넷째, 국방부는 희생자가 자진월북을 시도한 것이 맞다면 북한군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판단하는가? 세계 모든 나라들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일단 생명을 먼저 구조한 후 필요한 취재와 재판을 거쳐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런데도 북한은 희생자를 바다에서 꺼내지도 않은 채 튜브에 줄을 묶어 세 시간 동안 끌고 다녔으며 아무런 취조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총격을 가해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 그리고는 통지문을 통해서는 “침입자가 도주할듯한 상황이 조성되어서 총격을 가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서 국방부에 묻는다. 국방부는 24시간 이상 튜브 하나에 의존하여 바다에서 표류한 비무장 민간인이 북한 경비정으로부터 도주할 수 있다고 보는가? “도주할듯한 상황”이라는 북한의 설명이 궤변이라고 판단하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라면 향후 한국군도 고의든 우연이든 우리측 경계선을 넘어오는

북한의 비무장 어선이나 표류하는 북한 민간인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격침 또는 사살해버릴 용의가 있는가? 비무장지대를 넘어 귀순해오는 북한군 병사를 총격으로 사살해버릴 용의가 있는가? 지구상에서 북한 말고 그렇게 행동하는 나라가 있는가? 국방부는 여기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자진월북의 사실여부를 떠나 국방부의 대국민 설명이 신뢰하기 어려운 비겁한 내용이었음을 자인해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부와 국방부에 촉구한다. 이번 북한군의 만행은 임시방편식 사과 한 마디로 덮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역사는 이번 북한 만행에 대한 한국의 대응에 대해 “정부와 군이 남북관계 악화를 방지하는데 연연하여 철저히 국민의 안전과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사건”으로 기록할 것이다. 해서 지금부터라도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을 지키는 정부와 군의 본분을 다해줄 것을 재삼 촉구한다.

2020년 9월 28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일동